

테마칼럼

남도의 개발전

도시와 삶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공공지원 없이는 도시재생사업 성공 없다



노경수

도시재생 사업은 저소득층의 보호와 사회통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호갈등 해소, 개발이익의 공공환수 등을 위한 공공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광주시에 접수돼 있는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지구에서 주거기능 위주의 초고층에 해당하는 35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다. 심지어 한 사업지구는 비록 중심상업지구이긴 하지만 최고 63층까지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과잉공급, 건설 불경기 등 주택시장의 침체로 그러한 계획이 실현될 것인 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만일 시장여건이 좋아져 갑작스럽게 그러한 아파트들이 도심 내에 들어선다면 광주는 돌이킬 수 없는 '콘크리트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구도심 거주민뿐만 아니라 공직자, 전문가, 그리고 광주 시민 모두가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간 시행되었던 도시정비사업은 첫째, 민간개발 위주의 사업으로 대상지의 선정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이 지나치게 사업성 위주로 되어있다. 주민들의 소득수준이나 최저주거기준, 취업을 등 주민들의 '속성'은 무시되는 반면 조합·시공사·정비업체·철거용역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익 추구는 사업추진에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조합과 시행사의 이익추구와 정부의 대량주택공급 정책은 단조롭고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만드는 고층 아파트를 양산하고 말았다. 또 기존 거주자의 주거비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고가의 공동주택 공급은 원주민 재정착을 저조하고 마을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셋째, 거주민 대부분이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보다는 부동산의 가치 높이기 사업, 삶의 터전의 상품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유지보다 사유재산의 보전과 개발이익 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때문에 세입자나 임차인 등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도 지방도시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도시재생(再生) 활성화 기본법'으로 일괄 정비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먼저,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조합 중심의 사업추진방식은 광주시와 같은 지방도시에는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도시 예비타당성, 저소득층의 보호와 사회통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호갈등 해소, 개발이익의 공공환수 등을 위한 공공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중앙부처별 사업중심의 지원에 산을 장소중심의 특정시범재정비구역에 집중투자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연계해, 경제·사회·복

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세입자, 임차상인, 소유자가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되어야 한다. 계획구상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 기회를 늘리는 방안은 미래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에서 가치있게 고려할 요소이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단기 거주용 순환주택을 운영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지원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넷째,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후시설의 재생은 창조도시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야 한다. 결국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인 예술인과 장인, 창조적 직업군들이 거주하고 문화와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민선 5기 광주시장 당선자 공약에 '떠나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 광주의 도시활성화를 위해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이며 중앙정부의 정책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당선자의 도시재생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결실을 맺어지길 기대한다.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높아진 성장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 내외에서 5.8%로 상향 조정했다. 우리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달리며 2009년 1.2%로 떨어졌던 성장률에 비해 4.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만도 못한 게 현실이다.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은 379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대기업은 60만3000개의 일자리를 감소했다. 따라서 대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일자리 만들기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도 시급하다.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실효성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화려한 경제지표는 서민층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체감경기 회복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내 경제의 높은 성장률도 몇몇 대기업의 실적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만도 못한 게 현실이다.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은 379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대기업은 60만3000개의 일자리를 감소했다. 따라서 대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일자리 만들기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도 시급하다.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실효성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화려한 경제지표는 서민층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농어촌 특수성 살리지 못한 교원 배정

내년부터 도서와 벽지지역 학교의 교원 배정기준이 새로 마련돼 전남지역 교사수 감원 규모가 다소 줄어들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별 교원배정 지역군'을 기존 4개 지역군(群)에서 도서·벽지 지역을 별도로 나눈 5개 지역군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남지역 교사감축 규모가 당초 800명 선에서 5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 배정기준에 도서·벽지 지역이 추가돼 전남지역 교사 감축 규모가 다소나마 완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올해 783명에 이어 내년에도 500여명의 교사가 타지역으로 옮겨갈 때 농어촌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불과 2년 사이에 전남 전체 교원의 10%가 줄어들 것이다.
교원 감축은 학습수를 줄여야 하고 학급당 학생수 증가, 교사들의 수업시간 부담 가중 등 각종 부작용이 뒤따른다. 전남도교육청의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올해 정원 외 기간제 교사 160명을 추가 투입하고 교사수 감원 규모가 다소 줄어들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별 교원배정 지역군'을 기존 4개 지역군(群)에서 도서·벽지 지역을 별도로 나눈 5개 지역군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남지역 교사감축 규모가 당초 800명 선에서 5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타격을 주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올해 정원 외 기간제 교사 160명을 추가 투입하고 교사수 감원 규모가 다소 줄어들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별 교원배정 지역군'을 기존 4개 지역군(群)에서 도서·벽지 지역을 별도로 나눈 5개 지역군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남지역 교사감축 규모가 당초 800명 선에서 5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 배정기준에 도서·벽지 지역이 추가돼 전남지역 교사 감축 규모가 다소나마 완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올해 783명에 이어 내년에도 500여명의 교사가 타지역으로 옮겨갈 때 농어촌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불과 2년 사이에 전남 전체 교원의 10%가 줄어들 것이다.
교원 감축은 학습수를 줄여야 하고 학급당 학생수 증가, 교사들의 수업시간 부담 가중 등 각종 부작용이 뒤따른다. 전남도교육청의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올해 정원 외 기간제 교사 160명을 추가 투입하고 교사수 감원 규모가 다소 줄어들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별 교원배정 지역군'을 기존 4개 지역군(群)에서 도서·벽지 지역을 별도로 나눈 5개 지역군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남지역 교사감축 규모가 당초 800명 선에서 5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박병주 한국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16강 진출의 쾌거는 온 국민을 흥분시키고 있다. 2002년 그랬던 것처럼 8강에 대한 기대도 한껏 고무되고 있다. 전국은 이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우리 선수들이 경기하는 날이면 서울 시청 앞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수많은 사람이 열광적으로 응원해 나가고 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 선수가 터뜨린 골에 열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 더구나 국제축구연맹에 가입한 208개 나라 가운데 우리

기고 이희현 국가 공동체의 발전과 공공선(公共善)의 실현은 자신의 삶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보훈은 참전 용사들의 정신을 오늘날 국가 발전의 정신적 에너지로 승화하는 것이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 전쟁에서 300만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고 한반도 전체가 황폐화되면서 우리 민족에게 씌울 수 없는 상흔(傷痕)을 남겼다는 점이다. 호국보훈 정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남북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남북이 추구해야 할 일은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이다. 이미 한국전쟁의 중요한 배경이었던 이념대립은 세계무대에서 사라졌다. 거침없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남북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면서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닦는 것이 한반도의 미래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다. 한국과 북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응원을 보내고 있지만 남북의 선수들이 단일팀을 꾸렸다면 세계적 축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상상해보라. 북한의 정대세 선수나 지윤남 선수가 우리의 박지성, 박주영 선수와 함께 뛰는 모습을! 이처럼 남북이 상호 협력하고 힘을 합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세계무대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월여고 3년>

새벽 발인 장례식장 하루치 사용료 요구 횡당

얼마 전 가까운 친척어른이 작고해 전남 목포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게 되었다. 고향이다 보니 많은 문상객이 와 있었고 더운 여름날 3일 장에 대비한 준비를 하느라 유가족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런데 발인 당일 다음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게 됐다. 발인 날 아침에 장례식장 측에서 그날치 장례식장 사용료 전액을 상주 측에 내라고 요구했다. 상주 측은 이른 새벽에 빠져나가는데 무슨 하루치 사용료를 내라는 거냐며 발끈해 다투게 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풍습상 발인은 전부 다

새벽부터 준비해 장지로 가는 것이기에 사실상 장례식장은 하루종일 쓰지 않는다. 장례식장이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인 당일치 사용료 전액을 내라는 건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다.
장례식장들은 고인을 앞에 두고 그 유가족들이 돈 몇 푼 때문에 체계하게 굴지 않는다는 걸 악용해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다. 장례식장의 이런 나쁜 관행이 하루빨리 근절되었으면 좋겠다.
▲전성길·광주시 서구 화정4동

無等鼓 월드컵과 광주 전남 월드컵경기장의 함성이 남아공까지 전달돼 태극전사들이 원정 승전보를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 필자도 홈스테이를 위해 집에 와 있는 중국 학생들과 함께 광주 월드컵경기장을 찾아 '대~한국'을 외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 오른다.
/장필수 사회부차장 bungy@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주간 申滄榮 편집국장 曹慶亮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222-4918 시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72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 제 부 2200-634 <F A X 227-9500> 언론매체부 2200-669
정 치 부 2200-641 <F A X 227-9500> 체 육 팀 2200-673
사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